

“올해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 추경 편성”

김승환 교육감, “남은 7개월치”... ‘내년부터 어린이집분 전액 정부책임 선언’에 대한 화답 차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지난 5일 올해분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 가운데 남은 7개월치를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분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 전액을 책임지겠다고 선언한 데 대한 화답 차원이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전북의 경우 금년에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 5개월분을 책정해왔다. 나머지 7개월분은 추경예산안에 편성하겠다”면서

“이는 지난주 교육청 간부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쉴 수 없을 정도로 정부 책임, 대통령 공약 이행 을 촉구했고 시도교육감들은 거듭 연대를 다짐했지만 마치 외로운 섬처럼 전북교육청만 남아 있었다”고 짚은 뒤 “그 과정에서 전북 교육청 간부직원들과 단위학교 교직원들이 어려운 과정을 겪었다”고 위로했다.

김 교육감은 “불행 중 다행으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국민의 기대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 전액 정부책임 선언이 나왔다. ‘세상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을 것”이라면서 전북교육가족들이 느끼는 감회는 굉장히 남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그러나 “정부가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의 전액 정부책임을 선언했

지만 유치원 무상보육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며 “이는 정부책임을 절반만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부에 대해서는 “업무에 집중하고 교육부 업무가 아닌 것은 털어내라”고 당부했다. 어린이집 문제를 하루속히 관할관청인 보건복지부에 넘겨 보건복지부가 법률상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김 교육감의 조언이다.

/정해은 기자

김상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될까

지난 2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결과보고서가 채택될지 주목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회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제출했다.

인사청문 보고서는 여야 모두가 임명에 동의하면 ‘적격’, 반대 의견이 있으면 적격과 부적격을 함께 적는다.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의혹과 쟁점, 정책적 견해를 종합해 작성하는 게 관행이다. 다수가 부적격을 주장할 경우 이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20일 이내에 김 후보자 보고서 채택이 실패할 경우 문 대통령은 다시 10일 이내의 범위로 기간을 정해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두번째 요청도 보고서 채택에 실패할 경우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대통령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정국의 경색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 난감하다. 특히 줄줄이 이어지는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적격,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부적격 의견을 밝히고 있다. 국민의당은 당초 ‘송곳 검증’을 예고했으나 점차 유화 모드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 정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대 부적격’ 입장을 강조했다.

바른정당도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단,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협조 여부는 당내 의견을 모아 정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박지원 전 대표, 김성식 의원을 비롯해 청문위원인 채이배·박선숙 의원이 김 후보자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을 보내고 있다. 국민의당은 오는 8일 의원총회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뉴스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가유공자들에게 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대통령 “전쟁경험 통치수단 삼은 정치 청산할 것”

현충일 추념사 “국가보훈처 위상, 장관급 기구로 격상... 애국이 보상받는 나라 만들자”

문재인 대통령은 현충일인 6일 “전쟁의 후유증을 치유하기보다 전쟁의 경험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았던 이념의 정치, 편가르기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62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애국의 역사를 통치에 이용한 불행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애국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모든 것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한분 한분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며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도 없고, 나눠지지도 않는 그 자체로 온전한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독립운동가의 품속에 있던 태극기가 고지쟁탈전이 벌어지던 수많은 능선 위에서 팔려졌고, 파죽광부·간호사를 환

송하던 태극기가 5·18과 6월 항쟁의 민주주의의 현장을 지켰으며, 서해 바다를 지킨 용사들과 그 유가족의 마음에 새겨졌다”면서 “애국하는 방법은 달랐지만, 그 모두가 애국자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은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제도상의 화해를 넘어서 마음으로 화해해야 한다”며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데 좌우가 없었고 국가를 수호하는데 노소가 없었듯이 모든 애국의 역사 한복판에는 국민이 있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애국의 역사를 존중하고 지키겠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공헌하신 분들께서 바로 그 애국으로, 대한민국을 통합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며 “이 나라의 이념 갈등을 끝내고 이 나라의 증오와 대립, 세

대갈등을 끝낼 분들도 애국으로 한평생 살아온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면 보상받고 반역자는 심판받는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이 애국심을 바랄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동의 해준다면 국가보훈처의 위상부터 강화하겠다.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겠다”며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그 가족이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국이 보상받고, 정적이 보상받고, 원칙이 보상받고, 정적이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자”며 “개인과 기업의 성공이 동시에 애국의 길이 되는 정당당당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자”고 덧붙였다.

/뉴스스

세월호 기간제 교원 순직인정 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세월호 사고로 목숨을 잃은 단원고 기간제 교사를 순직으로 인정하기 위해 법령 개정 작업을 시작한다.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위험직무순직 인정 근거 마련을 위해 오는 7일부터 12일까지 공무원연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연급법’ 적용 대상 중 ‘국가 또는 지자체 정규 공무원 외의 직인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참사 당시 순직 인정된 교사와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을 구조한 만큼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인권위원회의 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거쳐 법령 개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기간제 교원 2명에 대한 위험직무순직 인정 심사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기간제 교원이 공무원연급법 적용대상자로 지정되면 청구서를 통해 심사를 거쳐 순직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뉴스스

민주당-정읍시 대통령 공약이행 정책 간담회 가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정읍시는 5일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책 간담회와 눈길을 끈 것은 정읍시가 대통령 정책 공약집에 맞춰 지역현안 사업 추진을 건의한 것이다.

미생물 융복합 전북과학기술원 건립(대통령 공약집 102쪽 4차 산업혁명 부응하는 미래인재 양성), ICT융합 의료산업 비즈니스벨트 조성(대통령 공약집 105쪽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육성), 한국화학연구원 전북분원 건립(대통령 공약집 105쪽), 한국방사선진흥원 설립(대통령 공약집 127쪽 연구개발특구 연구단지 기반 운영효율화), 국가동물케어 복합단지(대통령 공약집 136쪽 신기술기반 지역산업 육성) 등 모두 12개 지역현안사업을 대통령공약과 연계해 지원 건의했다.

특히 정읍시는 AI·구제역 등 축산 방역 강화와 발생에 대한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방사선 기반 한국형 백신적용 시설 신축을 건의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통해 문화유산의 보존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박재만·최인정, 군산조선소 정상화 새정부에 건의

문재인 대통령의 군산조선소 가동 정상화 공약에도 불구하고 오는 7월 1일자로 예정된 군산조선소 일시 가동중단 방침엔 변화의 기류조차 감지되지 않고 새정부를 상대로 지역현실을 직접 대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5일, 도의회 박재만(군산)·최인정 의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방문해 공약사항인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조선소 가동중단 공시의 이면에 ‘현대중공업 경영권 승계 작전’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공식으로 건의했다.

이번 방문 배경은 지난달 말 새민금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 등 조선소 정상화를 위한 우회지원 약속을 밝혔음에도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철회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다는 우려에서 시작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박재만 의원은 현대중공업측이 조선업 경기악화를 빌미로 합병계정안 국회 통과 이전에 법인분할을 시도하여 경영권 승계를 가속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군산조선소를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은 5분기 연속흑자다. 매출이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251% 증가한 1271억원을 기록했을 정도로 조선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면서 박 의원은 군산조선소 흑자 가동중단 배경과 경영권 승계 의혹을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두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이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우곡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난은 학교에서
복합한 교육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원천 기정의 ‘보급지리’ 역할을 재강화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